



PART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실적
- 제3절 평가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조사결과
- 제3절 평가

제5장 홍보

- 제1절 개요
-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제3절 평가

제6장 기타 주요활동

- 사무처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개선
- 임직원 교육유형 내실화
- 전산 시스템 효율성·보안성 향상

제1장

언론피해 상담

제1절 개요

위원회 상담업무는 언론보도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분쟁해결의 첫 창구이다.

전화, 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되는 문의 및 조정신청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조정·중재절차를 통한 구제 방법과 절차적 요건 등 조정·중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위원회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절차 또는 해당 타 기관 관련 정보 등 맞춤 안내로 언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상담은 총 3,865건으로, 전년 4,133건 대비 26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상담 건수가 감소했다기보다 2025년부터 상담 건수 집계 기준이 되는 상담서를 '상담 횟수'가 아닌 '상담 사안'별로 작성하기로 그 기준을 정립하여 동일한 상담신청인의 반복적인 상담을 개별건으로 집계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상담을 이용한 경로, 상담처리 결과, 상담이 집중되는 매체유형 및 구제수단의 비율 등 전반적인 추세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전화·방문 등을 통한 대인 방식의 상담 비중이 감소한 반면,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상담이 증가 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 및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피해회복 방법을 문의하는 비중보다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방송사 홈페이지 등)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피해회복 방법을 문의한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언론보도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주요 실적

1 상담경로

위원회 상담은 전화 상담이 2,086건(54.0%)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여 여전히 핵심 채널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이메일 상담은 975건(25.2%)으로 전년 대비 586건 증가하였고, 국민신문고 577건(14.9%), 인터넷 게시판 129건(3.3%)이 그 뒤를 이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상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방문 83건(2.2%), 우편 15건(0.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담경로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화나 방문 상담 등 대면 상담의 경우 이용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제한되는 반면, 이메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은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심리적 부담이 낮으며, 상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추후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8. 최근 3년간 상담경로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경로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23	3,995 (100)	3,272 (81.9)	104 (2.6)	34 (0.9)	149 (3.7)	421 (10.5)	15 (0.4)
2024	4,133 (100)	2,757 (66.7)	127 (3.1)	68 (1.6)	389 (9.4)	786 (19.0)	6 (0.1)
2025	3,865 (100)	2,086 (54.0)	83 (2.2)	129 (3.3)	975 (25.2)	577 (14.9)	15 (0.4)

※ () 안의 숫자는 %

2 상담 처리결과

위원회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가 3,730건(85.9%)으로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으로 타 기관 안내 280건(6.4%), 소송·고소·고발 안내 275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안내 비중이 상당한 이유는 상담 이용자들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절차를 거쳐 구제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상담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소송·고소·고발 안내 및 타 기관 안내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기간이 도과했거나 상담대상 매체가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조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유형에 관한 상담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언론보도 플랫폼의 다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 양상이 복잡해지는 미디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29. 최근 3년간 상담 처리결과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 처리결과					총계
		조정절차 안내	소송·고소·고발 안내	기타 위원회 업무 안내	타 기관 안내	기타	
2023	3,995	3,708 (80.5)	264 (5.7)	15 (0.3)	456 (9.9)	165 (3.6)	4,608 (100)
2024	4,133	3,937 (89.7)	191 (4.3)	16 (0.4)	248 (5.5)	90 (2.0)	4,482 (100)
2025	3,865	3,730 (85.9)	275 (6.3)	11 (0.3)	280 (6.4)	48 (1.1)	4,344 (100)

※ () 안의 숫자는 %

※ 복수 답변 시, 개별유형을 모두 집계한 것이므로 총계가 상담건수보다 많음

※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 안내를 의미

3 상담매체 유형

상담 대상 매체 유형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3,013건(52.2%)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처음 과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방송 592건(10.2%), 인터넷뉴스서비스 524건(9.1%), 뉴스통신 362건(6.3%), 일간신문 311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관련 상담이 70%에 육박해 신문·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의 피해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그 피해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담 건수는 소폭 감소했음에도 상담매체 유형을 기준으로 한 전체 상담건수가 전년도에 비

해 증가한 것은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단일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확산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0. 최근 3년간 상담매체 유형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뉴스서비스	기타	불명	총계
2023	3,995	423 (7.5)	128 (2.3)	865 (15.3)	12 (0.2)	295 (5.2)	2,285 (40.4)	-	666 (11.8)	172 (3.0)	809 (14.3)	5,655 (100)
2024	4,133	736 (13.1)	153 (2.7)	615 (11.0)	6 (0.1)	257 (4.6)	2,641 (47.1)	-	446 (7.9)	74 (1.3)	685 (12.2)	5,613 (100)
2025	3,865	311 (5.4)	116 (2.0)	592 (10.2)	65 (1.1)	362 (6.3)	3,013 (52.2)	-	524 (9.1)	130 (2.3)	664 (11.5)	5,777 (100)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총계가 불일치

4 상담대상 유형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회 상담은 3,722건(93.8%)으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기타 113건(2.8%), 언론사의 콘텐츠 총 102건(2.6%), 포털뉴스 18건(0.5%) 및 댓글 12건(0.3%)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언론사의 콘텐츠’는 언론사가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한 언론보도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도 게시한 경우를 ‘전재’, 기존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만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를 ‘자체 콘텐츠’로 분류하였다.

언론사의 콘텐츠 관련 상담은 2023년 총 66건(1.6%)에서 2025년 102건(2.6%)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소비가 확대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에 보도된 언론보도에 대한 상담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언론중재법상 조정 대상에 포섭되지 않아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된 원 보도를 배제한 채 플랫폼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최근 3년간 상담대상 유형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대상 유형						
		언론 보도	포털 뉴스	언론사의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언론 보도 전재	자체 콘텐츠			
2023	3,995	3,627 (88.8)	23 (0.6)	37 (0.9)	29 (0.7)	9 (0.2)	358 (8.8)	4,083 (100)
2024	4,133	4,004 (95.4)	17 (0.4)	28 (0.7)	33 (0.8)	8 (0.2)	105 (2.5)	4,195 (100)
2025	3,865	3,722 (93.8)	18 (0.5)	63 (1.6)	39 (1.0)	12 (0.3)	113 (2.8)	3,967 (100)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총계가 불일치

※ 용어설명

- 언론사의 콘텐츠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전재된 언론보도 또는 자체 콘텐츠

5 피해구제수단

상담으로 파악한 신청인이 원하는 피해구제수단을 보면, 정정·반론보도가 3,328건(61.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손해배상 1,262건(23.5%), 열람차단 360건(6.7%)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밖에 기사 수정 95건(1.8%), 추후보도 88건(1.6%), 고소·고발 64건(1.2%), 보도·배포금지청구 21건(0.4%), 기사 외 정보 삭제 17건(0.3%), 강제집행절차 11건(0.2%), 기사심의 10건(0.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신청인들이 금전적 피해구제보다 정정 및 반론보도를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상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침해배제 성격의 열람차단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수단

(2023. 1. 1. ~ 2025. 12. 31.)

연도	상담 건수	피해구제수단											총계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열람 차단	기사 수정	기사 외 정보 삭제	고소·고발	보도·배포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기사/선거 기사 심의	기타	
2023	3,995	3,148 (61.0)	99 (1.9)	866 (16.8)	247 (4.8)	148 (2.9)	19 (0.4)	84 (1.6)	37 (0.7)	9 (0.2)	8 (0.2)	497 (9.6)	5,162 (100)
2024	4,133	3,637 (68.9)	86 (1.6)	944 (17.9)	264 (5.0)	116 (2.2)	14 (0.3)	48 (0.9)	7 (0.1)	8 (0.2)	11 (0.2)	147 (2.8)	5,282 (100)
2025	3,865	3,328 (61.80)	88 (1.6)	1,262 (23.5)	360 (6.7)	95 (1.8)	17 (0.3)	64 (1.2)	21 (0.4)	11 (0.2)	10 (2.3)	126 (2.3)	5,382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수단 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수단의 총계가 불일치

제3절 평가

위원회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조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뉴스 소비 플랫폼이 다양해진 만큼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 양상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각 매체유형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안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복잡다단해진 언론보도 피해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상담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전자조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신청내역 및 담당 중재부, 사건결과 등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필요한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담 및 조정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절 개요

2025년 위원회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총 300건의 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소규모,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분쟁예방 교육과 언론인 전문연수를 비대면·대면(오픈형)을 적절히 활용해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연수를 부산 등 지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아울러 언론고충처리인 연수에서 언론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튜브 뉴스콘텐츠 제작자 연수를 진행하여 1인 미디어의 저널리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전문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교육 신청 화면을 [상시 교육]과 [교육 연수]로 이원화하고 직관적으로 용어를 변경해 교육 신청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통계를 좀 더 정확히 관리하고자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교육을 상시 교육으로 편입하여 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상세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위원회는 <언론폐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141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133건, 각급 기관·일반인·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별로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 교육을 26회 진행하는 등 총 300건의 교육을 성료하였다.

대상별 <연수 프로그램>을 구분해 보면 먼저,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한 <언론인 전문 연수>는 4회,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4회,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1회 운영해 총 9회를 실시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위원회 시정권고 제도 관련 커리큘럼을 추가해 차별 금지 등 사회적 법익 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면 참석이 어려운 수강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교육 3회, 대면 교육 1회로 총 4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QR 코드로 실시간 진행되는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기자들의 교육콘텐츠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해당 지역기자협회와 협의해 4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고충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직 고충처리인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언론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심층적인 위원회 제도 강의로 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동·하계 연수를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헌법과 언론법, 전문 언론분쟁 변호사의 업무 및 법조전문 기자에게 듣는 취재현장 등 실무 중심의 조정·중재제도와 언론법제 강의로 구성되어 예비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부터 각급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맞춤형 위탁 연수를 4회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기본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 위원회 조정제도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진행한 맞춤형 위탁 연수를 기점으로 서대문50플러스센터(2025. 5.),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2025. 7.)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중장년층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과 미디어 관련 교육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대학(원)생 연수>는 총 6회 실시하여 언론피해구제제도와 조정 사례 교육, 현직 언론인 특강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언론법학회와 협력해 마련한 연수 과정에서 언론법제 관련 학계의 최신 논의를 공유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였는데,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유형과 상황에 부합하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팀 단위의 조를 편성해 경쟁을 펼치는 <모의조정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18개 팀, 총 74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3개 팀을 선발해 경연을 펼쳤다.

표 33. 2025년도 교육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구분	상시접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계
언론인	25	9	34
(예비)법조인	0	2	2
대학생	21	6	27
초·중·고 학생	133	0	133
공무원 등	88	0	88
기업 임직원	4	0	4
기타	3	9	12
계	274	26	30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25년 위원회는 상시 교육인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총 141회 실시하였다. 수강 대상별 분류를 보면 공무원 등 88회, 언론인 25회, 대학생 21회, 기업 임직원 4회 순이었다.

한편,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그 외 인격권 침해> 등의 대상별 커리큘럼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과정별 새로운 사례들을 발굴하였다.

표 34.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23. 1. 1. ~ 2025. 12. 31. / 단위 : 회)

연도	언론인	대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23	30 (873)	18 (431)	125 (5,850)	3 (31)	0 (0)	176 (7,185)
2024	18 (341)	15 (456)	112 (4,176)	3 (48)	0 (0)	148 (5,021)
2025	25 (514)	21 (627)	88 (3,144)	4 (52)	3 (50)	141 (4,387)

* () 안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소양 함양을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자유학기제 실시, 교원 네트워크와 꿈길 등의 홍보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스쿨은 총 133건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년도 81건에서 52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1.6배(64.2%↑)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위원회의 주요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3 언론인 대상 연수

가. 언론인 전문 및 언론고충처리인 연수

2025년 <언론인 전문 연수>는 총 4회, <언론고충처리인 연수>는 1회 진행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소규모 및 지역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3회, 대면(오픈형) 1회를 혼합 진행하였으며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저널리즘 환경과 저널리스트로서 역할 고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한 시의성 있는 강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정권고 심의 기준 및 사례 학습의 커리큘럼을 강화하여 차별 금지를 포함한 사회적 법익 침해 관련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연수에서는 최신 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법을 제시하고,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35.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4. 3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20명
제2차 언론인 전문 연수	9. 2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20명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2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18명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2. 11.	(오픈형 모집) 언론인	31명
2025년도 언론고충처리인 연수	6. 20.	언론사 고충처리인, 고충처리 관련 실무자	27명

언론인 전문 연수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대전·세종·충남(4월), 인천·경기(6월), 강원(10월), 전북(11월)에 서 총 4회 진행하였다. 지역 언론인들의 저널리즘 전문성 및 윤리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개최된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정정·반론보도 신청에 대한 실무적 대응 노하우,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심리 건강, AI 검색 시대 지역 언론의 대응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표 36.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4. 3.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14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6.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23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0. 24.	강원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및 강원언론학회 회원	19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9.	전북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10명

지역 언론인 워크숍



4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사례로 보는 언론 조정절차 및 언론 판례, 협상 이론 등의 주제로 5일간 진행되었으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깊이 있게 제공하였다.

표 37.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2. 17. ~ 2. 2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
하계 예비 법조인 연수	8. 18. ~ 8. 2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17명

예비 법조인 연수



5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수

위원회는 올해 총 5회의 대학생 연수(서울 4회, 부산 1회)와 대학원생 연수 1회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연수는 현직 언론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관련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저널리즘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연수 후 간담회 등으로 언론인 지망 대학생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학원생 연수는 한국언론법학회와 협력하여 올해 처음 진행하였으며, 언론법 분야를 중심으로 학계의 최신 논의를 공유하였다.

표 38.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서울)	2. 24. ~ 2. 25.	전국 대학생	27명
제2차 대학생 연수 (부산)	5. 13.	전국 대학생	8명
제3차 대학생 연수 (서울)	7. 31.	전국 대학생	23명
제4차 대학생 연수 (서울)	8. 5.	수원대학교 학보사 기자	12명
제5차 대학생 연수 (서울)	8. 13.	전국 대학생	24명
2025년도 대학(원)생 연수	11. 27.	대학(원)생	11명

대학생 연수



6 맞춤형 위탁 연수

위원회는 기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맞춤형 위탁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중·장년층의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호 협력하였다.

올해는 기관 간 MOU의 일환으로 총 4회의 맞춤형 위탁 연수를 실시하였다.

※ MOU에 따른 서울시 산하 50플러스센터와 맞춤형 위탁 연수 4회, 언론피해 구제교육 3회 실시

표 39.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맞춤형 위탁 연수	2. 20.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디어생활> 강좌 수강 신청자 (서대문50플러스센터)	19명
제2차 맞춤형 위탁 연수	5. 22.		16명
제3차 맞춤형 위탁 연수	9. 18.		15명
제4차 맞춤형 위탁 연수	11. 13.		15명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MOU 현장



서대문50플러스센터 MOU 현장



맞춤형 위탁 연수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기업·기관 홍보 담당자,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디지털 홍보 전략, 시정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표 40. <일반인 연수> 실시현황

(2025. 1. 1. ~ 2025.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3. 14.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종사자	14명
제2차 일반인 연수	6. 27.	기업 및 기관 홍보 담당자	36명
제3차 일반인 연수	10. 20.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담당자	31명
제4차 일반인 연수	12. 9.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담당자	22명

일반인 연수



8 모의조정대회 개최

위원회는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팀 단위의 조를 편성해 경쟁을 펼치는 <모의조정대회>를 5년째 개최하고 있다. 2025년에는 18개 팀, 총 74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서면 심사 후 최종 3개 팀이 추려져 경연을 펼쳤다.

모의조정대회는 언론분쟁해결뿐만 아니라 분쟁해결 분야(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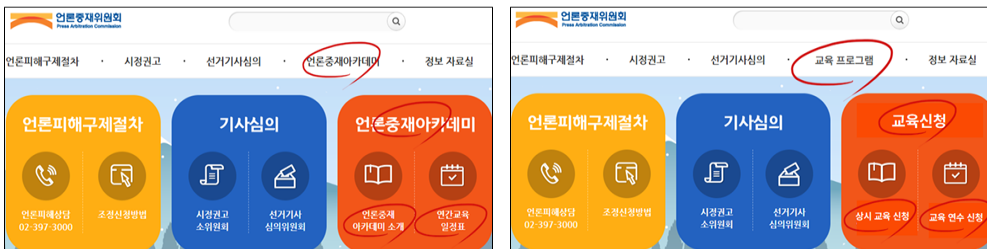
모의조정대회 시상식



9 홈페이지 교육 메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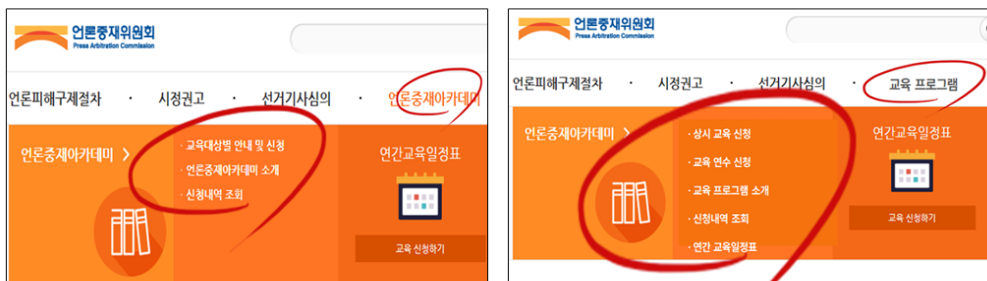
2025년 위원회는 이용자 친화적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의 혼재되었던 신청 메뉴를 [상시 교육]과 [교육 연수]로 이원화하고, 대상별 맞춤 신청 기능을 도입하여 직관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청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홈페이지 교육 메뉴 개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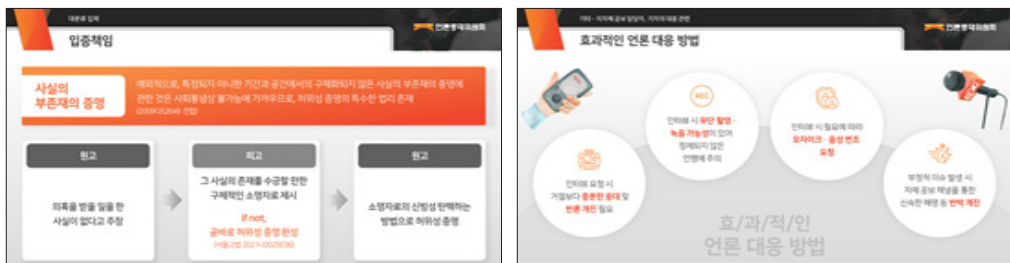
연수 프로그램

연론인 >	예비 범조인 >	대학생 >
맞춤형(단체) 위탁 >	일반인 >	

10 교육 PPT 개발

위원회는 지역 사무소 자체 개발 교육 자료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위원회 PPT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PPT 템플릿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템플릿은 PPT의 가독성을 높여 지역 사무소 교육 콘텐츠로 보완될 예정이다.

교육 PPT 개발



제3절 평가

2025년 위원회는 역대 최대 교육 실적을 달성해 2020년 이후 최대치인 연간 300건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학회, 유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생부터 언론사 고충처리인, 유튜브 제작자까지 교육 대상을 다각화하여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위원회 교육사업의 세부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서비스 접근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지역 대학생을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신설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회와의 홍보 협력으로 대학 상시 접수 교육을 전년 대비 약 40% 증대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 수요를 창출하였다.

또한 교육 접근성이 낮은 군소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 비대면 및 대면(오픈형) 연수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수강 기회를 넓히고 홈페이지 메뉴를 대상별·과정별로 세분화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자 직관성을 높이고 신청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였다.

둘째, 교육 내용을 전문화하고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언론고충처리인, 유튜브 제작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를 확대하여 현장의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전문적·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따른 저널리즘의 책무성 교육을 선도하여 저널리즘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셋째,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및 서대문50플러스센터와 MOU 체결, 한국언론법학회와 협업, 유튜브 뉴스 제작자 등 1인 미디어들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계층 간 경계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였다. 또한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유튜브의 조정대상 포섭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2026년에는 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차별 금지 등 사회적 법익 관련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뉴스콘텐츠 유튜브'의 조정대상 매체 포함 필요성을 교육과정에 적극 편성해 법 개정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의 전국 단위 사업 등 교육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여건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접근성을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의 기법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회를 전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AI 프레젠테이션 툴과 판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업무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시정권고, 선거기사심, ADR과 설득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심화 교육을 편성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전 직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위원회 전체의 직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제1절 개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는 미디어 및 언론법제 분야의 이슈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1월 14일자로 기존 연구팀을 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3월 17일자로 박사급 및 보조 연구원 등 연구인력을 신규 배치하여 언론분쟁과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센터는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사업, 학술세미나 개최,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및 학회 후원 세션 실시, 현안보고서/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격권 보호의 방향과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FOCUS ON MEDIA], [사건 속 법률],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판례토크] 등 다양한 코너에서 미디어 법제 전반의 중요 이슈를 소개하고 판례·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체계를 정비하여 기존에 1년간의 언론관련판결을 분석하던 방식에서 3년간의 확정된 언론관련판결을 통계를, 쟁점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그 분석대상을 정교화하고 확장하였다.

연구용역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이 3건 도출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에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심화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2025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에서 표현의 자유, 미디어 규제, 저널리즘 윤리, 인공지능과 플랫폼 책임을 조망하는 기획을 추진하였다. 각 호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인격권 보호의 방향과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을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1호에서는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인격권을 주제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간 게재된 연구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인격권 침해 양상을 정리하고, 주요 연구 주제와 논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한 학문적 논의의 축적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및 제도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2호는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 확산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및 독일·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지 제11권 제3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미디어 정책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와 정보 유통 구조의 플랫폼화가 공론장 형성,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2025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제3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제1호	기획 논문	김민정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10년의 연구 동향과 학문적 영향력
		노현숙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초상권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구문선, 유영권, 이재진 언론인의 번아웃과 대처, 회복 경험에 관한 연구
		이수종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제2호	기획 논문	권형돈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
		박선영, 이준환 언론중재법의 20년 입법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역대 제·개정법안 및 회의록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윤장열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위한 제언 -유럽연합, 독일,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제3호	기획 논문	장선미 디지털 헌정주의 관점에서 본 민주적 미디어 플랫폼 공동규제 모델의 규범적 설계
		정 란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및 한국 법제도의 시사점
		노현숙 디지털 미디어 광고·홍보 환경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연구 논문	최영재 SI 시대 한국 언론의 'SI 포획'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 자율성 침식 위험과 규범적 대응의 방향 -

나. 계간 <언론중재>

계간 <언론중재>는 미디어 법제 전반에 관한 전문적 논의를 독자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특히 단편적인 이슈 소개에 그치지 않고 판례·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2025년에는 매체 환경과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시의성과 문제의식을 겸비한 주제를 중심으로 코너를 구성했다. 메인 코너인 [Focus on Media]의 봄호에서는 팩트체크를 둘러싼 플랫폼의 책임 문제에 초점을 두고, 허위정보 확산 환경에서 언론과 플랫폼의 역할을 법제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여름호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를 둘러싼 인격권 침해 문제를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가을호에서는 대선 이후 기획으로서 선거를 둘러싼 미디어 지형 변화와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고, 겨울호에서는 2025년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AI 기술이 미디어 산업, 저널리즘, 관련 제도 전반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AI 학습에 활용되는 뉴스 저작권과 공정이용 논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고인(故人) 재현이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문제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코너에서는 암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 자신이 게시한 글에 달린 댓글을 관리하지 않은 정치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소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현대 사회의 법적 쟁점을 조망했다. 또한 [판례토크]에서는 베키어 쓴 기사에 대한 책임 인정 사례와 대법원 변론 영상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논란 등을 다루었다. [칼럼] 코너는 재난보도, 기 후보도와 같은 저널리즘 주제 및 브레인 룯(brainrot, 뇌섹음), OTT를 통한 K-컬처의 황금기와 같이 폭넓은 사회현상을 주제로 다루었다.

2025년도 계간 <언론중재> 봄호 (통권 174호) 내용



호수	주요 내용
2025년 봄호 (통권 174호)	<p>[Focus on Media 정보 신뢰의 위기와 팩트체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 팩트체크를 내려놓다 - 가짜뉴스 현주소와 플랫폼의 책임 (윤지원 Ph.D. Fellow Scholar, Media Education Lab) 플랫폼 팩트체크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헌법적 쟁점 (조영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교수) <p>[사건 속 법률] 디지털 유산의 일신전속성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와 10세 소녀의 죽음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유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 주), 백지원 변호사)</p> <p>[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최근 미국 판례와 한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p> <p>[판례토크]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p> <p>[칼럼] 재난보도와 트라우마: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p>

2025년도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 (통권 175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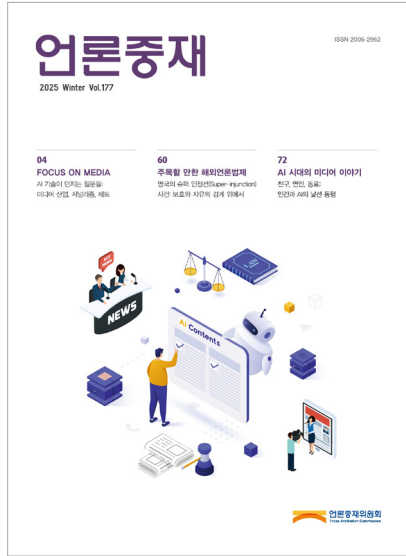


호수	주요내용
2025년 여름호 (통권 175호)	<p>[Focus on Media 연예인 사생활 보도와 인격권 침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활약과 언론의 기생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2. 연예인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p>[학술세미나 발제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과제 (윤재남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8중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p> <p>[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뉴스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기준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원, 언론학 박사)</p> <p>[사건 속 법률] 청소년 SNS 규제: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 (최형준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변호사)</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돌려 말해도 명예훼손?” ‘암시’로 책임지게 된 Zachary Young vs. CNN 사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p> <p>[판례토크] 이름이 낙인이 될 때, 지명과 혐오표현의 경계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칼럼 언론법학자의 시선] 브레인 룯(뇌섹음),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장래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교수, <브레인> 매거진 편집장)</p>

2025년도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통권 176호) 내용



호수	주요 내용
2025년 가을호 (통권 176호)	<p>[Focus on Media 미디어와 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에서 유튜브까지, 미디어와 정치의 공진화 (정일권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제21대 대선으로 본 선거 미디어 지형의 변화 (이신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선거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과제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p>[사건 속 법률] 가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은? (곽재우 법무법인(유한) 광장 파트너변호사, 정은주·이성풍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댓글도 방치하면 범죄?: 혐오 표현을 담은 온라인 댓글을 방치한 정치인의 책임에 관한 Sanchez v. France 사건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p> <p>[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죽음을 넘어서는 기술, 인공지능 디지털 부활과 애도 기술에 대한 고찰 (우숙영 미디어아티스트, 미디어디자인학박사)</p> <p>[판례토크] 반복되는 온라인 괴롭힘, 어떤 법으로 막아야 하나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칼럼] 기후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실재: 기후 리터러시 부재가 만든 악순환 (박상욱 JTBC 기자)</p>



호수	주요내용
2025년 겨울호 (통권 177호)	<p>[Focus on Media AI 기술이 던지는 질문들: 미디어 산업, 저널리즘, 제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I 기술이 흔든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쟁점들 (김경달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겸임교수) 2. 뉴스룸에 들어온 인공지능 기술, 독일까 독일까?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3.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언론보도와 AI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p>[사건 속 법률] AI 기술의 성별 편향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국의 「TAKE IT DOWN Act」 제정 사례와 한국 법제의 과제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이경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영국의 슈퍼 인정선(Super-Injunction) 사건: 보호와 자유의 경계 위에서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p> <p>[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친구, 연인, 동료: 인간과 AI의 닳선 동행 (오철우 국립한밭대학교 과학기술학 강사, 전 한겨레 과학담담 기자)</p> <p>[판례토크] 재판 공개의 빛과 그림자: 대법원 변론 영상과 초상권 침해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p> <p>[칼럼] 컨버전스 컬처, 글로벌 문화의 장이 된 넷플릭스 (김현식 중원대학교 특임교수,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p>

다.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는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비롯한 언론분쟁해결 실무와 언론법제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제공했다.

2025년 9월 초 발간된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는 총 2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의 분석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 502건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내에 확정된 사건 288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 1 장 제1부에서는 판결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원·피고 승소율, 손해배상액 분포 등 일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결 추이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별 사건을 넘어선 언론 관련 판결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 1 장 제2부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범위와 지위,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의 인정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이로써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에 대한 최근 판결 경향을 정리했다.

제 2 장에서는 2024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중 주요 사건을 선별하여 총 17건을 수록하고, 각 판결의 전문과 판결 이유,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상세히 제시했다. 해당 판결들은 손해배상청구, 보도거제청구, 기사삭제청구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형사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함한 기타 판결도 함께 다루어 유관 판결까지 폭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202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라.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위원회는 언론학과 법학 분야에서 미디어 및 인격권 보호와 관련한 해외 동향, 이론, 판례 등 주요 현안을 연구·조사하여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먼저 언론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뉴스 유통 주체와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현안보고서인 ‘뉴스플루언서의 개념과 분류기준 분석: 국내외 논의 동향과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뉴스 인플루언서 현상에 대한 국내외 학술·정책적 논의를 종합하여 뉴스플루언서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 기준을 이론적·비교법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로써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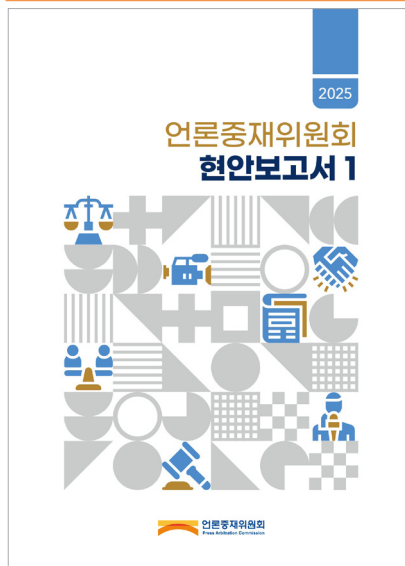
언론과 비전문 저널리즘 주체의 경계가 흐려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플루언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체계의 주요 기관 동향 분석’에서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감독 구조와 집행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조정기관(DSC), 법정 외 분쟁 해결기관(ODS)으로 구성된 DSA의 감독 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틱톡 사례를 들어 DSA의 집행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법정 외 분쟁 해결제도가 권고적 성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제수단과 플랫폼 내부 절차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 모델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국내 디지털 플랫폼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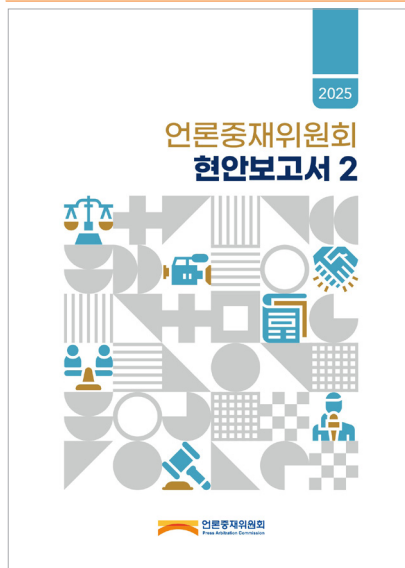
법학 분야에서는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를 주제로,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CDJM)의 설립 배경, 절차와 현황 및 2025년 결정례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운영 원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는 진실성, 정보·의견의 구분, 제목과 내용의 정합성, AI 콘텐츠의 명시, 반론권 보장을 핵심 윤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제재권 없이 의견서 공표로 민주주의와 언론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AI·디지털 환경에의 적응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구조와 인격권 보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언론규범과 분쟁 해결 체계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뉴스 유통 주체, 플랫폼 규율, 언론윤리 자율규제를 하나의 거버넌스 틀 안에서 조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기준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1



2025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2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현안보고서	
연구자	제목
정서현	디지털서비스법(DSA) 운영 체계의 주요 기관 동향 분석
최인화	프랑스 언론윤리조정위원회의 현황과 최근 결정 사례

마.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새로운 뉴스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연구 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연구보고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시기별 변화 분석’을 주제로, 위원회의 조정 성립 사건을 대상으로 시기별·매체별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위원회의 조정 대상 매체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구제제도 형식 역시 각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다변화·정교화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 신문, 나아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조정 대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제도의 시각적 가시성과 원보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복합적 형식이 도입·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두 번째 연구보고서는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판결 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2022~2024년 국내 민·형사 판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최근 3년간 선고된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사건의 민·형사 판결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전통적 명예훼손 법리를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도, 채널의 공익·저널리즘 기능, 전파력, 수익 구조, 표현 형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유무와 범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서 인격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는 위원회의 실제 조정 사례와 사법부 판결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증적·법리적으로 조망하였다.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진화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인격권 침해 판단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5년도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	
연구자	제목
정서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형식의 시기별 변화 분석
최인화	유튜브 관련 인격권 침해 판결분석과 법제 개선 방안

2 연구용역

2025년 연구센터는 기존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업무를 연구용역사업으로 확장하였고, 위원회 제도·업무에 실질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연구뿐 아니라 정책연구까지 연구과제의 폭을 넓혔다. 또한 해당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위원회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예규」를 2월 21일 자로 제정하였다.

2025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총 3건으로 각 연구과제는 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이하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②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방안 연구(이하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연구용역’), ③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자원 현황 분석 및 최적화 방안 연구(이하 ‘운영 자원 관련 연구용역’)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은 유튜브 뉴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사업자 중심의 유튜브 뉴스 콘텐츠 생산은 사실 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왜곡보도로 이어지더라도 효율적·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경우 언론중재법상의 조정대상으로 포섭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중에서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구독자 수’나 ‘계속성’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는 유튜브 뉴스채널들(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 세계 유튜브 ‘뉴스/정치’ 카테고리 월간 인기 순위 상위 1~200위)의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 등은 다년간 논의되어 왔으나 그간 개정안이 제시된 바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실질적 언론개념에 기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용역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연구용역은 국내 언론 관련 기구의 심의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시정권고 심의 기준의 조항별 상위법 체계를 살펴보았다. 상위법과의 체계 정합성 점검 등으로 현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각종 보도권고기준 제·개정 등을 반영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작업 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자원 관련 연구용역은 위원회 운영 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동결 및 사업비 감액과 같은 현 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위원회 설립과 법적 근거, 수행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정적인 자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가. 학술세미나

2025년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위원회는 (사)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시행 20년간의 제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간 드러난 한계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실효적 언론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발제에 앞서 학술세미나 서두에는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기여한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 위원장(변호사, 현 언론법학회 고문)이 <디지털 피해구제제도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윤재남 언론중재위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언론중재법 시행 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윤 부장판사는 언론중재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터넷 미디어 중심의 환경 변화에 비해 현행법은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의 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 부장판사는 유튜브 등 새로운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면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중재법상 ‘언론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반복하여 방송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으로 얻은 수익을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전통적 매체 분류법을 따르는 현행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언론의 책무 수행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평가 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전·현직 언론인이 운영하는 시사보도 채널 등을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체계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이 교수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이 명확성 원칙 등 위헌법률심사기준을 통과하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제1주제에 대해서는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와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변화된 환경 속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문제를 언론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법학회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피해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도 학술세미나 개최현황	
일 자	2025. 6. 13.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 언론중재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법 시행 후 언론중재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 과제 제2주제 : 디지털 시대의 언론의 범위와 실효적 언론피해구제 방안 • 기조연설자, 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연설자 : 박용상(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사회자 :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윤재남(서울제8중재부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2주제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 중재위원) - 지정토론자(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선(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제2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 손형섭(경상대 법학과 교수)

2025년도 학술세미나



나. 토론회

위원회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 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은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25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지낸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기자,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선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규정해 위원회 조정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으로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 표시영 교수는 연구용역 설문조사(총 1,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를 인용하였는데, 유튜브 중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매우 컸으며,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2명(93.2%)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이다.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5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자	2025. 12. 4.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제 :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유튜브 조정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제2주제 : 유튜브 뉴스채널의 유형과 피해구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3주제 : 유튜브 뉴스콘텐츠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의 검토 • 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 :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전 중재위원) - 발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변호사) 제2주제 : 표시영(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제3주제 :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 중재위원) - 지정토론자(가나다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준현(언론인권센터 변호사) 박종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윤선(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 대표 기자) 차기현(광주고등법원 판사)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2025년도 토론회



4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실시

위원회는 2025년도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6회 미디어시아(MediAsia) 2025에 사무처 직원을 파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별 정치·사회·문화적 맥락과 플랫폼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가 저널리즘의 성격과 공론장 형성, 인격권 침해 양상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협력단은 주요 세션에서 전통매체의 영향력이 약화된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혐오·공격적 표현,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인격권 침해가 개별 콘텐츠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을 통한 재유포와 알고리즘 노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인격권 침해를 단일 행위나 보도의 결과로 한정하기보다 피해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경로와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AI 기술 확산이 뉴스 생산과 유통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인격권 침해 양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었다. 이번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적 판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정·중재로 피해회복과 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



5 학회 후원 세션 실시

위원회는 <공론장의 신뢰 회복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가 공론장과 인격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국언론학회 2025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후원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저널리즘의 확산이 여론 형성과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에 제기하는 과제를 규제와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1발제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유튜브 저널리즘 규제 논의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다. 데버라 스톤(Deborah Stone)의 정책 패러독스 이론을 적용해 규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 대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이나 개별 콘텐츠 중심 규제를 넘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유튜브 뉴스 채널의 언론중재법 적용 가능성 등 향후 제도 설계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제2발제 <유튜브 저널리즘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다.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과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각 법률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보고,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도연구 콘퍼런스 용역



6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언론 자율규제 및 피해구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에 걸쳐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사무처 직원을 스웨덴과 일본의 언론 유관 기관에 파견하여 각국의 언론환경과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의 조화, 자율규제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1차 사업 참가자들은 스웨덴 미디어청, 공영방송 SVT, 미디어 옴부즈만(MO) 등을 방문하여 공영 미디어의 콘텐츠 관리 방식과 가짜뉴스 및 인공지능 기반 정보 확산에 대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적 구속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웨덴의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위원회의 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차 사업 참가자들은 일본 팩트체크센터(JFC), 일본신문협회, 게이오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유튜브와 SNS 등 비등록 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실태를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관련한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로 사전적 관점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향후 제도적 과제를 고찰할 예정이다.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제3절 평가

위원회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내외 언론법제와 주요 판결 연구, 유관 기관의 제도 및 동향 파악 등으로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5년 연구용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법제 주요 현안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고

위원회 제도·정책의 발전과 밀접한 주제로 연구영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술세미나를 열어 언론학·법학 관련 학술적 논의의 장을 신규로 마련하였으며 해외제도연구 교류협력으로 해외 학술세미나에 참가하고 해외 관련 기관 및 학회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기틀을 다졌다. 학회 후원 세션을 실시해 위원회 연구역량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 학자의 위원회 법제 관련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현안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위원회와 관련된 언론학·법학 분야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미디어법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위원회와 관련된 언론학·법학 관련 주요 이슈를 1년 동안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수록하였다. 또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는 연구센터 확대·개편으로 신규 배치된 전문 인력이 언론관련판결의 쟁점별 분석을 실시하여 수록함으로써 분석보고서 수록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다양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언론 법제 관련 연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국내외에 소개하고 위원회 법정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조사·연구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매년 조정·중재, 상담,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유형의 인격권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적 근거로 삼고 있다. 조사 결과의 상세 내용은 책자는 물론 홈페이지 내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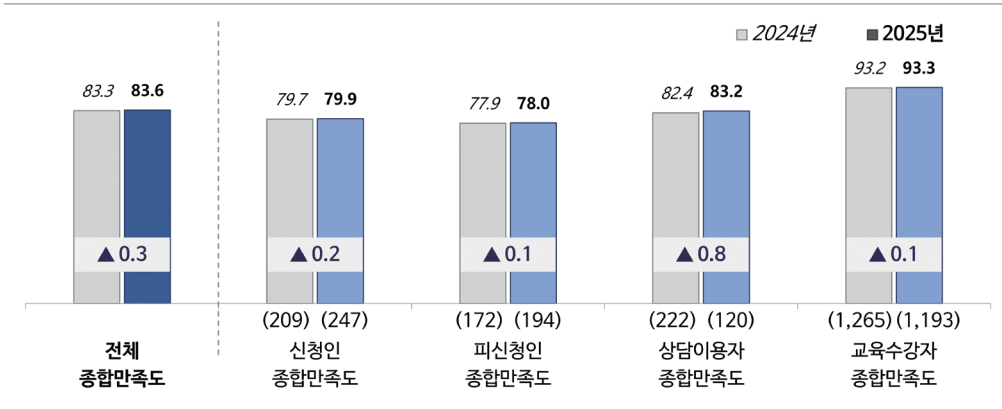
2025년 이용만족도조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7일까지 (쥬리서치리얼컨설팅에서 진행하였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피신청인 441명(신청인 247명, 피신청인 194명), 상담이용자 120명, 교육수강자 1,193명 등 총 1,7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따라 온라인(웹) 조사, 전화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별 평가항목은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 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차원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만족도 역시 살펴보았다. 접수 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 대상으로는 ▲상담창구 만족도, ▲조정 신청과정 만족도를 별도 조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식과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신청인/피신청인/상담이용자 공통으로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해 향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용의 편리성,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자세, ▲상담내용 신뢰성, ▲문제해결 도움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위원회 이미지, 인지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위원회 주관의 언론중재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평가하였다.

2025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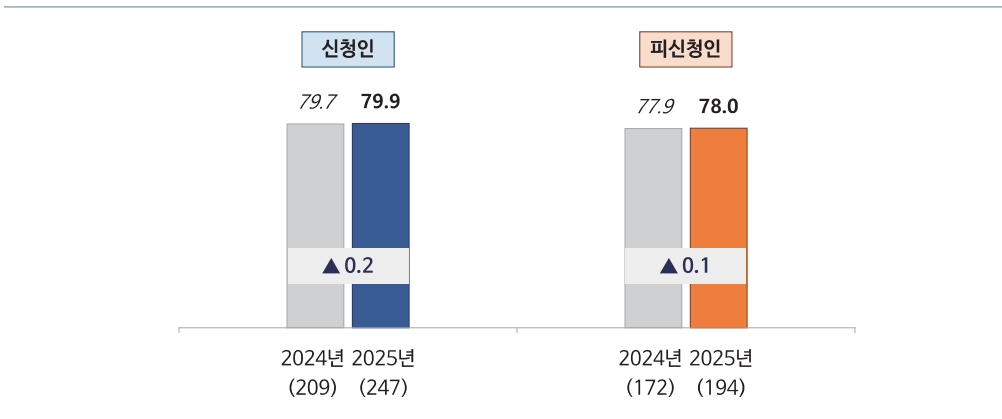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25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9.9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상승하였고,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78.0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신청인/피신청인의 종합 만족도가 모두 소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87.6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3.7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1.7점) > '조정 신청과정'(77.8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5.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3.2점) > '심리 후 절차 안내' (81.8 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9.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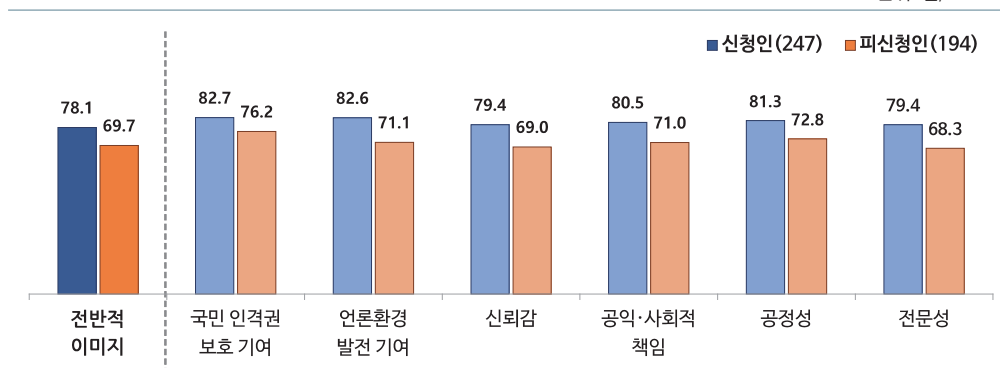
전년 대비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담창구',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 만족도가 각 0.4점, 2.7점 상승한 반면, '조정 신청과정', '심리 전 절차 안내',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심리 전 절차 안내' 및 '심리 후 절차 안내' 차원 만족도가 각 2.7점, 1.1 점 상승한 반면,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 만족도는 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기사 열람차단(삭제)'(91.7점) > '사과'(81.1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4.9점) > '손해배상'(70.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0.7점) > '기사 열람차단(삭제)'(70.6점) > '사과'(63.9점) > '손해배상'(4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경우 '손해배상 금액'과 '사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고, 피신청인의 경우 '기사 열람차단(삭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신청인의 경우 7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고, 피신청인의 경우 69.7점으로 전년대비 2.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이미지 평가 세부항목 중 신청인은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 '언론환경 발전 기여', '공정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피신청인은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 '공정성', '언론환경 발전 기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에서는 83.0%가 조정신청 이전에도 위원회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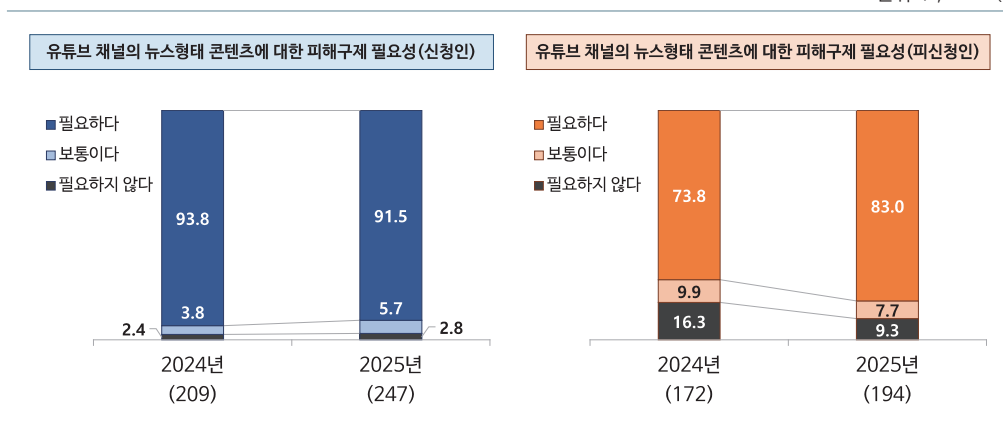
단위: 점, Base: ()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피해구제 시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청인의 91.5%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에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언론사 피신청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83.0%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인데, 일반 국민, 언론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한 피해구제에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신청인/피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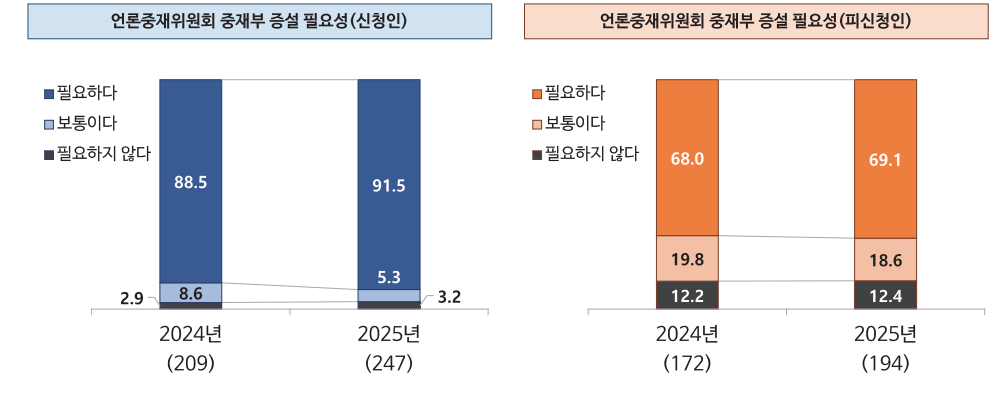
단위: %, Base: ()



아울러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사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도 병행하였다. 이 조사에서 신청인의 대다수인 96.4%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도 과반인 61.3%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언론사 또한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 91.5%, 피신청인 69.1%)가 중재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정·중재 사건의 신청 주체인 신청인의 긍정 응답이 피신청인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중재부 증설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절차 선택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75.6%가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

단위: %,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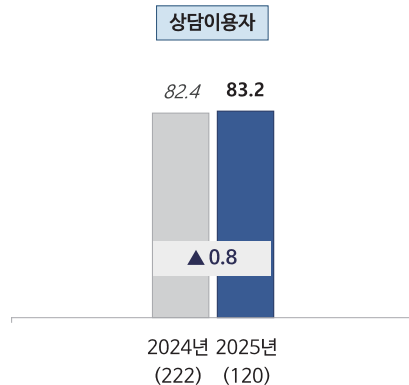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3.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성'이 86.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담원 경청자세' (86.5점), '상담내용 신뢰성'(85.0점), '문제해결 도움도'(80.1점), '상담이용 편리성' (78.6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위원회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자의 47.5%가 상담 후 조정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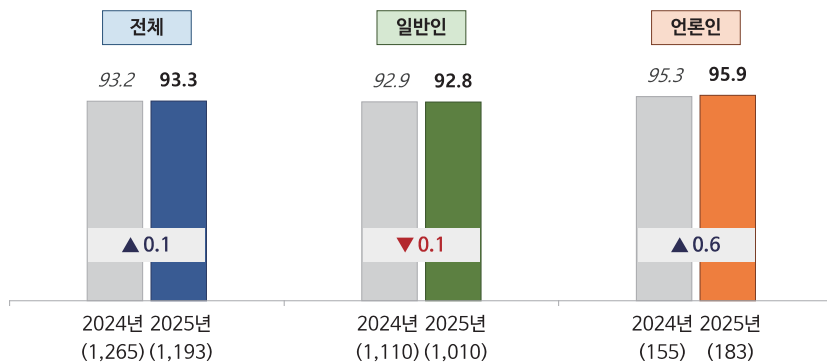
‘신청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져서’(30.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청매체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정 신청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각 9.5%), ‘상담 내용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돼서’(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3.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2.8점, 언론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5.9점으로 언론인 수강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수강자의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가 94.7점으로 가장 높고,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3.9점), ‘교육자료의 충실성’(93.1점), ‘주제 및 내용’(92.8점), ‘제도에 대한 이해’(9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제3절 평가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의 종합적 만족도가 전년 대비 모두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 진행’ 차원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돼 조정절차 전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인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7점 상승했으나,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3.3점 하락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원회는 단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조사 수행 업체, 실무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보고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실질적 니즈,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담은 피드백을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조정절차 개선에 필요한 수단 등을 마련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담이용자의 경우에도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0.8점 상승한 83.2점으로 나타났으나 세부항목 중 '문제해결 도움도', '상담이용 편리성' 항목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와 전년에 이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등 상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조사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조사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사 수정/열람차단(삭제) 청구권 도입 필요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위 문항들에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답하여 새로운 형태의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순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만족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조사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민적 관심도와 공감대가 높은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2025년 위원회는 홍보 전략의 초점을 위원회 인지도 제고에 맞췄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운영 중인 홍보 채널별 전략을 재검토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보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언론사와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민 대상 광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홍보 채널별 운용 전략을 고도화하였다. 유튜브 이용자에게 쇼트폼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관심도가 낮아지는 롱폼 영상 대신 쇼트폼 영상 제작 비중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블로그에서는 카테고리를 단순화하고 검색 유입을 늘리고자 일상 정보를 활용하였다. 인스타그램에도 유튜브와 블로그에 게시되는 콘텐츠의 미러링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유튜브 및 블로그 유입 경로를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국내 미디어지, 통신사, 주요 일간지와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단의 호주 언론평의회 등 미디어 유관 기관 방문, 해외 미디어 콘퍼런스 참여와 교류로 해외 유관 기관에도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위원회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대전, 경남, 광주에서 각 1개월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집행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가. 뉴스레터 「언론사람」

위원회가 매월 뉴스레터 형태로 발간하는 대외홍보소식지 「언론사람」은 중재위원 등 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위원회 소식과 각종 업무 통계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간물, 보도자료, 공지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한다.

다른 홍보 채널인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링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배포대상 수는 2025년 12월 기준 약 1만 6,200명이다.



나. 블로그

위원회 블로그는 기존 언론법제, 조정중재 관련 정보 콘텐츠를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블로그 이웃 수 증가보다 콘텐츠 조회수와 방문자 수 확대가 위원회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법제나 미디어 이슈 외에 대중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콘텐츠를 [톡톡 일상] 코너에 게시하여 검색 유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연계된 구독·댓글 이벤트, 위원회 소식 및 양질의 언론법제·미디어 정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충실한 정보 제공 채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2025년 주요 블로그 콘텐츠 목록		
코너명	코너 소개	주요 게시물 제목
언론법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논문, 뉴스, 미디어, 영화 등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코너	몰래 녹음, 동의 없는 녹음은 어디까지 괜찮을까?
		트리거로 살펴보는 탐사보도와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 정보	각종 위원회 연구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소개하고, 최신 미디어 이슈와 관련한 뉴스를 주제별로 요약해 제공하는 코너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이번 주 미디어 동향: 플랫폼 저널리즘 시대, 언론 조정의 대상은 어디까지?

2025년 주요 블로그 콘텐츠 목록		
코너명	코너 소개	주요 게시물 제목
위원회 소식	주요 법정업무 사례 소개 및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보도자료 등 내부 소식을 전하는 코너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언론중재위원회, 지난해 942건 시정권고 결정
개념어 사전	언론법제 및 위원회 언론조정중재 제도와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해 설명하는 코너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어뷰징이란 무엇인가?

위원회 블로그 콘텐츠



다. 유튜브

2025년 위원회 유튜브 채널은 이용자 노출이 쉬운 쇼트폼 위주의 영상 제작에 주력했다. 전문적인 언론법제, 미디어 이슈를 다루는 영상뿐 아니라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게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유튜브 콘텐츠 목록	
구분	주요 게시물 제목
롱폼	징벌적 손해배상, 왜 나왔을까?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에...AI 장난에 경찰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대상' 보도 살펴보기!
쇼트폼	당신이 지나치게[될 뻔]한 2000년대 레전드 광고!
	2025 언론중재위원회 모의조정대회 현장! 하루아침에 아동학대범이라고!?

롱폼 콘텐츠에서는 미디어 이슈와 언론법제 관련 영상을 주로 게시하여 전문적인 정보 채널로서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쇼트폼 콘텐츠에서는 위원회 캐릭터인 ‘어니’를 활용한 AI 영상 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친숙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수원, 전주, 대전 등 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도시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위원회를 언급하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 위원회가 제작하여 텔레비전으로 송출된 광고영상을 재발굴하여 쇼트폼 영상으로 게시하고,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영상으로 홍보 채널 구독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라. 인스타그램

2025년 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주로 유튜브, 블로그에 게시된 정보를 미러링하여 유입을 유도하는 경로로 활용하였다. 언론법제 등 다소 난해한 주제는 간략하게 소개하며 블로그, 유튜브에서 확인하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평균 연령층이 낮은 점에 착안하여 수능 D-100, 수능 D-1, 고등학교 개학이나 대학교 개강일에 맞추어 젊은 연령층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게시하고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였다. 신조어나 새로운 밈(Meme) 소개, 유용한 AI 툴 추천 등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사가 다양한 사용자들과 접촉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른 홍보 채널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위원회 블로그 이웃 추가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위원회 인스타그램 콘텐츠



마. 대면 홍보 캠페인

위원회는 온라인 홍보 채널과 연계하여 '신속·공정·무료' 키워드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위원회 서울사무처 건물(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 위원회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이벤트 게임으로 경품을 제공하였다.

언론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가 많은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기자와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 캠페인으로 현장에서 위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약 320명 늘리기도 하였다.

대면홍보캠페인 현장 사진



2 광고 집행

2025년 위원회는 단순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 혹은 에펠탑 효과라고 불리는 마케팅 전략에 기반하여 제한적 소수에게만 광고가 노출되는 공간에서 광고 횟수를 크게 늘리는 전략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광고를 집행하던 지하철 역사 등 열린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광고영상을 재생하여 접촉 밀도를 높이는 방식의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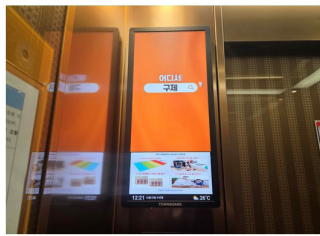
광고 대상 지역은 위원회 지역중재부 소재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엘리베이터 1대에서 최소 1,500회, 최대 3천 회 이상 광고가 재생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세부 광고 집행 내역		
매체명	광고기간	광고 노출 횟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대전·경남·광주)	2025. 11. 1. ~ 11. 30.	대전(602대, 90.3만회), 경남(605대, 90.7만회), 광주(344대, 103.2만회)

광고 집행(오프라인 광고)



대전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경남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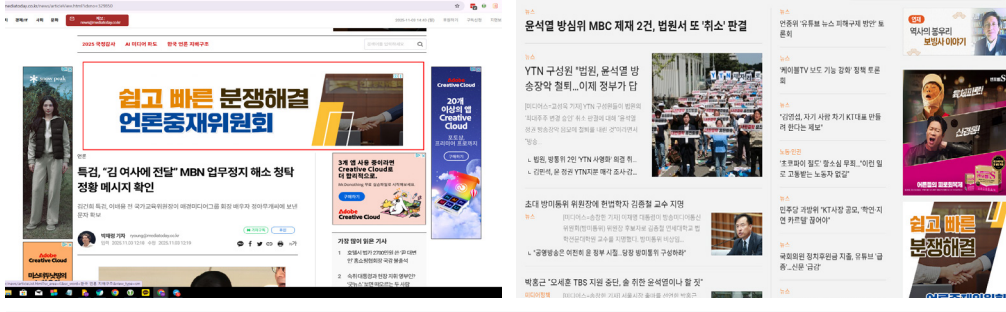


광주 지역 엘리베이터 광고

온라인 광고에서는 미디어, 법률 전문 매체에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인과 법조인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였다.

세부 광고 집행 내역		
매체명	광고 내역	광고기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기자협회보, 법률신문	쉽고 빠른 분쟁해결 언론중재위원회	2025. 11. 1. ~ 11. 30.

광고 집행(온라인 배너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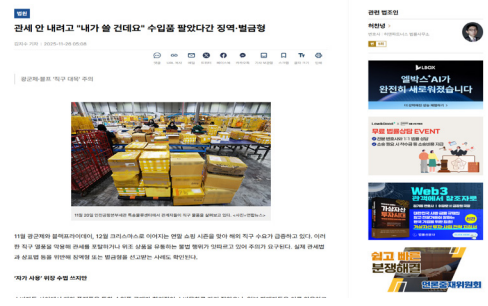


미디어오늘 배너광고

미디어스 배너광고



기자협회보 배너광고



법률신문 배너광고

3 국제협력 사업

가.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호주 언론사 및 유관 기관을 방문하였다. 호주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조사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언론 관련 동향을 파악한 뒤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기구인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를 방문했다. 민원의 빈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문의하고, 언론분쟁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제 입안에서 의견 제시 등 평의회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였다. 이후 언론평의회의 분쟁해결절차와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비교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 위원회 대표단은 호주 유일의 독립 뉴스 제공 비영리 통신사인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을 방문하여 편집국장과의 면담하였다. 연합통신의 고충처리제도 및 팩트체크부서의 운영, AI 등 새로운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호주 미디어 규제기관인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과 회의에서 미디어 공급자에 대한 규제기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호주의 문제 인식과 대처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눴다. 오보 및 허위정보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양 국가의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호주 언론사들의 자발적 가입과 자율규제에 기반한 분쟁해결절차를 바탕으로 언론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다. 통신미디어청 역시 법적 규제나 강제력을 이용한 분쟁해결보다는 언론사들의 자율규제나 자정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호주연합통신은 민간 언론사임에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광고 없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었다.

언론사의 자율규제와 자체적인 공정성 확보를 중요시하며, 규제기관도 언론의 자정작용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호주의 미디어 환경은 한국의 언론 환경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했다.

2025년도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일정	2025. 11. 24. ~ 11. 29.
방문지	호주
방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 •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 •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철환 감사(광주중재부) • 정회일 중재부장(서울제3중재부) • 김윤정 사무총장 • 김진하 시정권고심의팀 차장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호주언론평의회, 호주연합통신, 호주통신미디어청 방문

해외 기관에서 위원회와 교류하고자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2024년 5월 태국언론평의회(National Press Council of Thailand)를 방문하여 언론 분쟁해결절차와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바롱 림파트타마파니(Chavarong Limpattamapanee) 태국언론평의회 의장이 2025년 3월 24일 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언론분쟁 해결과 피해구제에 관하여 구체적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언론평해기구 교류협력



태국언론평의회 의장 위원회 방문

위원회는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의 언론사 및 유관 단체와 꾸준히 교류하며 한국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의 특유한 조정중재시스템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 해외학술연구 협력

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동향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연구·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매년 해외학술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영화 콘퍼런스(MCFCONF)에 참석하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제 간 통합, 제도적 발전 가능성 탐색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영상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저널리즘의 신뢰 위기,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등 세부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협력 대표단은 콘퍼런스에 참여한 각국 연구자들, 실무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위원회 및 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발제와 토론에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해외 학술 콘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이슈 및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참가자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유관 기관 실무자, 학술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하며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분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해외학술연구 협력 현황	
일정	2025. 6. 20. ~ 6. 22.
장소	싱가포르 난양기술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학술연구 협력 활동	제3회 국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영화 콘퍼런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재남 중재부장(서울제8중재부) • 하채은 중재위원(서울제5중재부) • 김윤정 사무총장 • 최은진 기획팀장

해외학술연구 협력



2025 해외학술 콘퍼런스 참석

제3절 평가

2025년도 위원회 홍보활동에서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홍보 채널 중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노출 기회를 최대한 늘려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고, 좀 더 친밀하고 익숙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홍보 채널 운영에 변화를 준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튜브 게시물의 누적 조회수는 2024년 말 기준 누적 조회수(약 6만 회)를 크게 넘어선 약 26.6만 회의 누적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2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가 누적된 것이다. 블로그 역시 2025년 한 해 동안 약 1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채널별 주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고려하여 이용자층의 관심이 높고 시의성 있는 주제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 것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오프라인 광고전략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대전, 경남, 광주 지역에 지역별 90만 회에서 100만 회에 달하는 집중적인 광고 노출로 단순노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위원회 대표단의 해외 언론사 및 유관 기관 방문, 국제 콘퍼런스 참석으로 미디어 동향과 실무적인 대응방향을 탐색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들과의 접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더욱 심도 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6년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 개정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역할 변화, 제도 개선사항,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정책을 인포그래픽, 영상,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홍보 채널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이용한 위원회 인지도 제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상·실행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좀 더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 사무처 업무환경 및 업무절차 개선

2025년 위원회는 변화하는 조직구조와 공공조직에 요구되는 업무방식의 전환에 대응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였다. 특히 조직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업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업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화하였다.

먼저, 지역총괄실 직제 개편으로 경기사무소에 지역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총괄실장이 부임함에 따라 경기사무소 내에 지역총괄실장실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지역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주도적인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주도사업의 일환으로 법원 등 주요 유관 기관과 접근성이 낮았던 부산사무소를 법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대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별 운영 예산 및 시설 규모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을 지역사무소 직원들과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총괄실 신설의 취지와 기능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검사 수감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절차 전반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기반 절차 전반을 면밀히 점검·재정비하고,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전자계약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공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계약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2026년 위원회는 전자계약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약 사무 전반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법정의 무구매 이행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 기반 계약 관리 범위를 소액 계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계약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 확대와 업무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사무공간과 시설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연한 인적자원 운용을 지원하는 공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처 환경개선



지역총괄실장실 신설



부산사무소 이전

2 임직원 교육유형 내실화

위원회는 업무 환경 변화와 조직 규모 확장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직원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업무 여건 속에서도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복리후생 제도의 체계적 운용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임직원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였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에 따른 업무 세분화로 교육 수요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심화하고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였다. 전년도에 도입한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개인 단위 교육 중심에서 상담·시정권고·조정·중재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무 연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활용도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인격권 보호 관련 제도의 발전과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 구성원의 학문적 전문성 축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직무와 연관성 있는 국내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수료를 지원하여 임직원의 중·장기적 전문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연구모임을 지원함으로써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주도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였다.

연수 제도 측면에서는 국내 위탁연수를 재개하여 외부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퇴직 예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력 전환기 직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직무 특성과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전산 시스템 효율성·보안성 향상

위원회는 법정 업무 전반이 전산시스템을 매개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업무환경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전산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무 전반에 활용되는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먼저 조정·중재 및 기사심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PDF 변환 및 리포팅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최신화하여 파일 변환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이로써 hwpX 등 일부 파일 형식에서 발생하던 변환 오류를 자동으로 해소하고, 클립리포트의 저장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업무 처리 과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시스템의 우편주소 라벨링 기능과 문서 서식 추가, 다량 사건 자료 동시 등록 기능 등을 보완하여 조사관 조정·중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에 이전 화면 기억 기능을 구현하여 반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선거기사심의 업무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출력물 보안시스템의 워터마크 기능을 고도화하여 출력자 정보(직원 계정, 출력 일시 등)를 비가시성 워터마크로 적용하고, 별도 장비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 발송 문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별도 호스팅 서비스로 운영하던 홈페이지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여 기기 의존성을 해소하고 물리 장비 노후화에 대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 서버에서 제공하던 전자신청시스템을 별도 서버로 이전·재구성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자신청시스템에서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신청자가 접수 결과 및 사건 처리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026년 위원회는 전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시스템별 전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말 장비 및 업무시스템의 서버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그룹웨어 및 ERP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위원회 법정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